

공수처 신설 더민주와 주중 공동 발의... 검찰개혁 고배

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반격 나선 국민의당

“국면전환용 수사 사과하라”...권한 통제·인사 혁신 나서 검찰 당혹감속 재판 대비 주력...오늘 박준영 영장 심사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또다시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추진을 발판 삼아 검찰개혁의 고배를 죄고 나섰다.

국민의당으로서 두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환승을 둘러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거듭 확인됐다면 반격에 나선다. 특히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최근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들의 비리와 의혹을 계기로 추진 중이었던 검찰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는 등 대대적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은 1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재 가동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전환, 검찰개혁의 고배를 더욱 바짝 죄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TF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와 재정신청 활성화 등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개별검사의 독립성을 위한 검찰조직·인사 개혁 방안 등 전반적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인 공수처 신설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번주 중 더불어민주당과 이견 조율을 마치고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당을 범죄집단으로 증거도 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유행가를 틀 듯 또 ‘셀프개혁’을 들고 나왔다”며 “검찰은 과거 자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국민의당은 야권공조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번에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가 먹히지 않은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검찰이 수세국면에 내몰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검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당한 현단계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두 의원을 불구속기소 한 뒤 재판과정에서의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대응이 최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과 연계돼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는 점이다.

물론 개별 사건과 제도개혁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공수처 신설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검찰이 소속의원들을 정조준함으로써 국민의당의 행보에 ‘심리적인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으로서 앞으로 두 의원의 재판과정과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같은 당 박준영 의원의 영장이 재청구된 상태에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일 열린다.

앞서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의원은 주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으로 두 의원을 불구속기소 한 뒤 재판과정에서의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대응이 최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과 연계돼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는 점이다.

물론 개별 사건과 제도개혁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공수처 신설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검찰이 소속의원들을 정조준함으로써 국민의당의 행보에 ‘심리적인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으로서 앞으로 두 의원의 재판과정과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같은 당 박준영 의원의 영장이 재청구된 상태에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일 열린다.

앞서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판사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의원은 주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증거인멸 우려 없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핵심인물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지난 30일 새벽 영장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축수산업 빼자, 언론인·교원 제외하자...개정안 일단 발의

가능성 커지는 ‘김영란법’ 보완 입법

소비 위축 목소리도 높아져

3당 지도부 여론 추이 주목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회에서의 보완 입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거론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 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만이라도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법 적용 대상 범위도 논란거리다. 현재가 김영란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

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위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언론인 출신의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여기에,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이르면 내달 초께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범위로 두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합헌 결정에 환영하면서,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3·5·10만원 상한’ 조정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5·10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가액 설정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외식·유행·농축수산업계의 소비를 위축, 경제적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어촌 지역 등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액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데다 국민 여론도 김영란법 손질에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여야 3당 지도부는 일단 법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 작업이 당장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朴대통령 휴가 복귀 하자...2野, 거센 압박

“야당 대응방식 바꿀수 밖에”

“우병우 감싸면 국민이 분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휴가에서 1일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운영방식과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야당의 대응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면서 야당 간 공조를 강화해 현안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계휴가를 다녀왔던 우 원내대표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개혁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혁신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면서 “8월 국회에서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거론하며 “역대 정권에서 의혹이 제기된 참모 문제를 두고 2~3주 시간을 끈 적이 있느냐”며 “불통의 정부, 불통의 청와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야당공조 강화에

발언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사드 배치 반대에도 함께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 원내대표가 휴가에서 복귀, 야권공조로 검찰개혁, 우리 당 두 의원의 영장 기각과 검찰 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퇴 등 정치현안에 대한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여름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우 수석을 감싸면 국민은 분노한다. 추락하는 지지도는 무엇을 의미하겠나”라며 해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농수축산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해 달라”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의회의 의장단으로 구성된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난 29일 전북도의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3개 광역의회의 의장단 9명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관련 건의안 3건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광주시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애국, 비방, 날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도로(SRT) 운영계획에 전라선 증편 계획이 배제돼 실망스럽다’며 수서발 SRT 연계 호남·전라선 증편을 건의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건의안 3건을 국회,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건의안 32건을 제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서 전국의 프랜차이즈를 만날 기회!

2016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6 8.19(금)~21(일)

8월 18일까지 온라인사전등록 무료

무료1:1가맹상담 기회

예비창업자를 위한 무료세미나

주최 **KFA** 社團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광주·전남지회
法人 Korea Franchise Association Gwangju Jeollanam-do Branch

주관 | 후원

www.yesexpo.co.kr 문의 02)856-1402